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귀한 열매 맺는 한걸음

기고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2000년 7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활동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민간주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개입으로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을 통해 공공에서의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과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44,531건으로 전년대비 14.5%,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7,971건으로 전년대비 25.6%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등 매년 늘어나 전년대비 25%증가한 5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하였다.

전국의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24시간 당직근무체계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업무지원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면 기능전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장기근속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실천현장에서 거부적인 대상자들을 만나 이들의 변화를 위해 적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업무의 스트레스 및 처우에 대한 불만족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아동관리보장원에 따르면 20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근무연수는 3.3년에 불과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및 전문성의 담보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임금체계 및 처우가 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느냐에 따라 임금체계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지역별 운영비(임차비) 차등지원으로 서비스 질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시 지원하는 예산

이 다르다 보니,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가, 임대(전월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임차비 집행으로 임차유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운영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부족분을 법인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하는 법인의 여건에 따른 편차와 나아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서비스 질의 차이도 발생한다.

셋째,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아동복지시설로 변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개소 및 이관 시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 용도와 입지조건에 맞는 건물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보강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노후된 건물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상자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휴먼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런 귀한 일을 아무나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하고 있다. 지역의 여건과 운영법인의 여건에 따른 상이한 지원이 아닌 어느 지역에 어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같은 처우가 이루어져 학대받은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과달루페 성모 축일인 12일 새벽(현지 시각)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대성당 주변에서 순례자들이 노숙하고 있다. 멕시코 천주교의 큰 행사 중 하나인 과달루페 성모 축일은 1531년 12월 12일 멕시코시티 인근 테페악 언덕에서 농부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것을 기념해 매년 열린다. **멕시코시티=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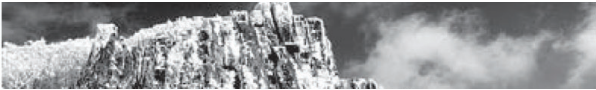
서석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당이 발각 뒤 집했다. 국민의힘 사무처의 ‘총선 판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당이 ‘우세’로 판단한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등 6곳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확보한 8석 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총선 참패 우려감에 당내 비주류들은 김기현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초도화 직전”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용산에 할 말 해야 한다. 이쯤되면 다 같이 용산(대통령실)에 가서 ‘도끼상소’라도 올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이 말한 도끼상소는 ‘지부상소(持斧上疏)’를 말한다. ‘도끼(斧)를 지니고(持) 상소(上疏)를 올린다’는 뜻으로 상소한 내용이 틀리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를 말한다. 옛 절대왕조시대 신하들이 임금의 노여움을 감수하면서 직언(直言)을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도끼상소였다. 도끼상소의 원조는 고려 충선왕(1308년) 때 감찰규정 우탁으로 알려져 있다. 우

도끼상소



탁은 충선왕이 아버지 충렬왕의 후궁이었던 숙창원비와 통간하자, 상복을 입고 도끼를 든 채로 대궐로 들어가 상소문을 올렸다. 왕과 가까운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충선왕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우탁의 상소를 받아들였다.

도끼상소는 독단과 패륜을 일삼는 임금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신하들의 결기를 보여준다. 도끼상소를 접한 임금들도 신하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높게 샀는지, 크게 화를 내면 서도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 최고 권력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권력자 주변에는 온갖 아침하는 이들이 들끓고, 국가 경영은 정도를 벗어나 수렁으로 빠지며 서민들의 삶은 피해를 진다.

기왕 당 내부에서 도끼상소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직언 세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박성원 편집국장

社說

어린이 무상교통 무산 광주시 책임이다

의회 예결특위 예산 전액 삭감

광주시의 대중교통 어린이 무상이용 정책이 무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13일 심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5월부터 6~12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청소년, 특히 고3부터 시행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백지화됐다.

광주시의 어린이 교통지원 사업비 삭감은 예견된 일로 여겨진다. 시는 당초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에겐 매일 1만원 정가권 지급 방안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청소년까지 무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단계에는 연간 90억원, 2단계에는 1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 대대적인 무상교통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

다. 하지만 올해 역대급 세수부족이라는 이유로 광주시는 슬그머니 무상교통 대상에 청소년을 제외시켰다. 내년 예산도 당초 100억원에서 13억으로 급감했다. 시는 결국 정책효과가 미비한 만 12세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회도 정책 효과가 큰 청소년을 제외시킨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시는 공공교통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비전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여러 차례 밝힌 광주 최초의 무상교통 정책에 대해 추진의지는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이라도 무상교통이 시작될 것으로 믿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광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은 서민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교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당장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해명과 무상교통이 이뤄지도록 심도 깊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잇단 불출마 선언, 정치 바꾸는 계기 돼야

이탄희·홍성국 의원도 동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홍 의원은 ‘당리당락을 앞세우는 정치의 후진성’을,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민심을 잃은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읽힌다. 이들의 불출마 선언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정치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탄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국민 정치개혁의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28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날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총선 불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홍성국 의원도 이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한계가 크다’면서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갖는 한계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락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진적 정치 구조와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정치가 비난을 계속 받으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로써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모두 여섯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불출마 선언은 지지부진한 정치권과 민주당의 혁신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장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두면서 선거제 퇴행이라는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현역 국회의원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이 양극화된 정치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의 관심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혁신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다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